

‘선결제 후정산’ 구조적 한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위기의 중개거래 플랫폼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영세 판매자 등 대규모 피해 현실로
“피해구제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한다. 1조 원대로 추산되는 미정산 피해액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영세 판매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됐다.

이번 파산은 ‘선결제 후정산’ 방식에 기반한 중개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이 터져 나온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위메프 건물 전경.

/뉴시스

피해는 막대할 전망이다. 법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폐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티몬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그친다. 위메프는 파산하면서 회생채권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

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자 성명문을 내려 법원을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톨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개거래 플랫폼 문제는 티

몬·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월 명품 플랫폼 발란 등에서도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플랫폼인 매치스페이스와 에센스마저 파산하는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영난과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에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선결제 후정산’ 방식이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선 손쉬운 현금 유동성 확보 수단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플랫폼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위험은 고스란히 영세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의 갑을 관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결제대금 미정산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철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제조합 가입이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정산 사태 발생 시 판매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플법과 같은 플랫폼 규제 법안은 미국의 통상 마찰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쇼핑, 배달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은 대부분 국내 기업에 독과점 사업자라 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마찰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이 더디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이라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유령 기지국 통해 해킹 의혹… 보안 우려 확산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지난달 27일부터 200건 이상 피해 파악
특정지역 통과시 수십만원 결제 제로도
KT, 피해 사실 입증시 전액 보상 방침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지역인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를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휴대폰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용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커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통신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KT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T 가입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와중에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광명·금천 일대를 지나간 휴대폰에서 수십만원이 결제됐다’는 글이 게시돼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작성자는 해킹된 날 뉴스에 나오는 광명·금천구 지역을 차로 지나간 적 있는 친구의 휴대폰에서 새벽에 71만원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이미 각종 경로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일 서울 한 KT대리점에 KT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아직까지 그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경찰 조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유령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는 해커가 만든 가상 기지국에 KT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접속되면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 정보가 해킹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KT는 자체 조사 중 광명 지역 피해자들의 통화 이력에서 KT가 관리하지 않는 미상의 기지국 ID를 발견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일 오후 3시경 광명 일대 피해 고객의 통화 이력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정황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7시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는 “점점 결과, 현재 통신망에 접속된 불법 기지국은 없다”며 “관리 절차 강화를 통해 비정상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소액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하지 않는 이상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KT 관계자는 “올 9월 사건 발생 이후로는 비정상적으로 탐지되는 건은 차단해냈고, 이미 결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결제 건은 고객에게 전화가 간다. 전담 센터도 운영 중이며 관련 해 공지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소액결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회사 측의 조치에도 KT 이용 고객들이 험사리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은, 소액결제를 차단해둔 상황에서 한도가 임의로 상향 조정돼 수십만원의 결제가 진행됐다는 피해자 제보가 나오고 있어서다.

KT는 피해 고객이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배후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노동자 350여명을 수송하기 위한 대한항공 보잉747-8i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기 페리 운행… “미측과 귀국일정 협의”

美, 한국인 구금사태

대한항공 B747-8i 대형기 투입
美 사정에 의해 당초 일정 연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외교부는 10일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측과 협의를 위해 지난 8일 워싱턴DC로 향했고 루비오 대사를 만나 10일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석방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이륙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세기에 승객 368명이 탑승할 수 있는 B747-8i 대형기를 투입 승무원 탑승 외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페리 운행을 준비했다.

통상 전세기는 10일 오전(현지시간)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구금된 우리국민을 태우면 대략 이날 오후 2시께 전세기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귀국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미 조지아주 포크스틴 이민세관 단속국(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틴 구금 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엿새째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금자 귀환을 위해 9일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귀환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판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춘 기자 ch9720@

美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대응 전략 점검

>> 1면 ‘재계 총수를 관세…’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현지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

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정이 HL-GA 공장 사태와 맞물리면서 정 회장의 발언 수위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출시 현재 25% 관세를 내고 있고 일본은

15%를 적용해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15% 관세 합의가 실행되기까지 현지 시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대차는 현지 생산과 재고 관리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관세 정책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다”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